

#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 건설·부동산·교통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 수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만원에서 11만원 선으로 늘어났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보증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료의 무기한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의 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지원 혜택을 준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시행=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차례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18일까지, 10~20년 된 건축물은 2015년 1월18일까지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허가권자에 보고해야 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내년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내년 3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고령자 고용연장하면 1인당 월30만원 지원



고속도로·철도·버스 교통카드 한장이면 'OK'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했다. 재고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장년연장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 환경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수 해양투기 금지=폐수는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 2016년 1월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 교육·문화

▲산업체 기술·기능인재 해외 유학 국비 지원=내년 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기술·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국비 유학·연수생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인재 10여명을 뽑아 학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 6단위로 확대=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어나고 일선 학교는 한국사 수업을 두 학기 이상 걸쳐 편성해야 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문화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 관람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하도록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된다.

## 사회·행정·법무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내년부터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이다.

## 서민 주거 안정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비싼 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 건보 적용

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 선택 가능,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직영점 추가 설치 금지된다.

## 농축산어업

▲발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겨울철 눈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20만원/ha씩 발농업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작물은 청보리, 호밀, 갈보리, 밀, 귀리, 콩, 녹두, 완두, 조,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다.

▲정부양육(쌀) 매입량 확대=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 37만t을 사들였으나 내년부터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협정 이행을 위해 추가로 APTERR 공여용 쌀 3만t을 더 사들인다.

▲원유(原乳)가격 산정체계 개선=소비자 기호가 고지방 우유에서 고단백질 우유로 변화함에 발맞춰 내년부터 유지방 중심의 현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유단백질 중심의 가격체제로 개편한다.

▲불법원양어업 처벌 강화=지금까지 불법 원양어업으로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내년 1월 31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어업으로 올린 부담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은 현재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 보건복지·통신

▲비싼 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감소=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든다.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줄어=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도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

## 최저임금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

##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 6단위로 확대

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채당급 상한액 인상=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채당급(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채당급 상한액이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오른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정년연장을 하면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 저소득 아동 치과주치의제... 대안학교도 무상급식

## 중요농어업 유산 지정제 시행... 도서 수산직불제 확대

## 광주시

광주시는 내년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분야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재정·환경·문화교육·일반행정 등 총 6개 분야 38개 제도와 시책을 확대하거나 바꾼다.

◇복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제 시행=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검진, 건강상담 및 예방교육, 지역 치과원과 연계한 치료서비스를 포함한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75세 이상 동네의원 무료독감 접종=그동안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광주시민 중 75세 이상에 한해 동네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날에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영구임대아파트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며, 건강 상담과 금연·알코올 등 건강생활실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환경 ▲탄소은행제 대상 전 부문 확대=가정과 학교로 한정됐던 탄소은행제 가입 대상이 전 부문으로 확대 시행된다.

▲중요산업 등록사수 감소화=기존 시·도지사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던 중요산업 등록사수가 시·군·구청장으로 축소된다.

◇문화·교육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광주시는 자체 시책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대상을 초·중·고·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중·특수학교,



무료 독감예방 접종받는 어르신들.

일부 고교 19만3000명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학교 22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비인가 대안학교 무상급식=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10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비를 지원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전남도

내년에는 전남도중요농어업유산 제도가 본격 시행돼 이 지역의 아름다운 농어업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지고, 농어업 관련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다음은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시책 등이다.

◇농정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제도 시행=도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제도가 운영된다. 도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매년 확대하고, 지정된 농어업유산에 대해 국가 및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농업종합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 제출 대신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으로 서류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섬 주민의 차량운임 지원 확대=여객선 운임 지원에서 섬 주민의 교육, 의료 목적 등 필수 생계수단으로 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객선 운임과 함께 차량운임도 지원한다. 7월부터 시행하며 섬 주민이 부담하는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한다.



원도 청산도 구들장은.

▲조건불리 도서지역 수산직불제 지역 확대=육지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 주민에서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 주민으로 확대했다. 여수, 고흥 등 6개 시군이 해당되며 어가당 49만원이 지원된다. ◇문화·관광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도로와 철도(500억원 이상), 하천(300억원 이상) 공사는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지면적 3만㎡ 이상 개발사업, 경관지구내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보건복지·여성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1000만원이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7536명)에게 급식비(1인 1식, 3500원)를 지원한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인상=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가사도우미와 교통부류비 비용도 10만원으로 오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